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53
----------	------

발의연월일 : 2024. 8. 27.

발 의 자 : 박용갑 · 허 영 · 염태영
임오경 · 박희승 · 이해식
황명선 · 박홍배 · 한민수
안규백 · 강유정 · 안호영
한병도 · 노종면 · 조인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누구라도 눈 깜짝할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지만,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딥
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
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 딥페이
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확인시키고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족히 넘어 혹시나 ‘내

사진 혹은 내 자녀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 못지않게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도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임.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을 넘어 인격적 살해를 당하게 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혹시 주변 사람이 볼까 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및 제44조의7·제7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저장한 정보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합성 영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만든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 영상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 영상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③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u><신설></u> 5. ~ 9.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저장한 정보</u>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44조의11(합성 영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만든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u>

제70조(벌칙) ①·② (생략)

<신설>

<신설>

1.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 영상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 영상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

<p>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저장한 정보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p>
---	--